

# 대법원 2016도10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7. 11. 에스케이텔레콤(주)와 그 직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에스케이텔레콤(주)가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가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주) 등에 대하여 벌금 5,000만(오천만) 원 등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도10102 판결)

##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소속 특수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선불폰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위○○, 박○○은 기존 가입회선 유지를 통한 피고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2010. 4.경부터 2014. 8.경까지 이미 가입된 선불폰 이용자들 중 선불요금을 소진하여 번호유지기간에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회사의 비용부담 아래 임의로 선불요금을 추가로 충전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함(이하 '이 사건 충전'이라고 함)
- 이 사건 충전을 위해 기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가입자들로부터 제

공받은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동전화 가입일 등)를 이용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됨

#### ■ 소송 경과

- 제1심: **피고인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위○○, 박○○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함
- 원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항소기각)**함
  -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목적 중 이 사건 충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음
  -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선불폰 이용계약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에 의하면 선불폰 이용계약은 '회사가 발생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카드 금액 및 사용기간 범위 내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므로, 선불폰 이용계약에 따른 원래의 수신가능기간 경과 후 번호유지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충전은 선불폰 이용계약에 포함된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충전은 피고인 회사의 시장점유율 유지·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피고인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아짐
- 피고인이 상고함

## 2. 대법원의 판단

### ▣ 사건의 쟁점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제24조),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제71조 제3호)으로 규정함
- 피고인들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충전을 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 판결의 결과

-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 ▣ 판단의 근거

-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

## 3. 판결의 의의

- 계약 내용 해석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선불폰 이용계약 체결시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범위에는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이용자의 선불요금을 충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그 정보를 사용하였더라도 목적 외 이용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임